# 고건, 신당 강행이냐 포기냐

### 대권 포기설·와병설 등 루머속
### 정국 구상 끝내고 곧 로드맵 제시
### 與 全大 합의 안될땐 20일 발표

지난 1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예방 이후 공식 일정을 접고 정국 구상의 장고에 들어갔던 고건 전 총리가 조만간 '고건 신당' 창당 등을 포함한 정계개편 로드맵을 발표하고 활동 재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고건 전 총리 측의 민영삼 공보팀장은 "고 전 총리의 정국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오는 20일 이전에 고 전 총리가 정국 구상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팀장은 이어 "고 전 총리가 정국 구상에 몰두하면서 그동안 대권도전 포기설, 와병설 등의 악성 루머가 떠돌아 곤욕을 치렀다"라며 "이 같은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고 전 총리는 그동안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들과의 활발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고 전 총리가 정계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시기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전당대회 의제 및 당헌·당규 개정 등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계개편 로드맵도 대선 구도와 정계개편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신당 창당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 또다시 모호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가는 정치적으로 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고전 총리가 여권의 내부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여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20일 전후해 전격적으로 신당 창당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전 총리가 신당 창당 카드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을 유도하는 한편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흔들어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지지율 제고에 나서 범여권 주자로 자리매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신당파와 사수파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고 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다면 고건 전 총리의 활로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며 정계개편 로드맵의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조직과 자금이 원활하지 못한 고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신당 창당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건 전 총리의 정국 구상은 결국 열린우리당의 전대준비위 합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현재 10%대 지지율 기록하고 있는 고 전 총리의 경우, 퇴로가 없다는 점에서 여당의 진로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신당 창당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통합신당·2월 전대 안된다"

### 광주지역 우리당 사수파 결의대회

광주지역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 70여명은 14일 오후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통합신당과 2월 전당대회 반대를 결의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는 2월 14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당 사수파의 활동이 구체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여권의 분열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이 노무현 정권 탄생의 산실이었다는 점에 지역 여권의 분열 양상을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 사수파인 '열린우리당을 사랑하는 당원' 70여명은 14일 오후 4시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당 사수를 위한 기간당원 결의대회'를 갖고 '비대위 해체'와 '2월 전당대회 반대'를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 "지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정치세력이 통합신당이 최선이 방법인 듯 하여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당원들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대위가 추진하는 2월 전당대회는 당을 해체·분할하려는 해당 행위"라며 "종전의 당헌·당규에 따라 3월 중 전당대회를 개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 격려 차원에서 참석한 김두관 전 최고위원도 "모든 정치생명을 걸고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2월 전당대회 개최를 막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사수파 당원들도 '혁신모임' 소속의 백원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3시 광주시당에서 '열린우리당 혁신운동 광주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도 "이번 전당대회가 통합신당과 수임기구 구성을 전제로 치러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지역 당 수사파의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시당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대부분 통합신당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당은 지난 13일까지 지역별 선거인명부를 작성을 마치고 오는 24일까지 지역운영위원장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젠 實利다

〈5〉5·18정신 왜곡 말라

# '투쟁 시위' 이용 그만 '과격 도시' 멍에 벗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올해로 27주년을 맞는다. 광주가 '폭도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민주의 성지'가 되기까지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광주시민들이 흘린 피와 땀이 밑거름이 돼 '5·18 광주사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됐다. 그래서 5월 정신은 광주시민들에게 남다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보면 5월 광주는 정치인들의 얼굴 내밀기 경연장, 일부 과격단체들의 투쟁 장소로 변질하기도 했다.

5월이면 전국의 학생·농민·노동자 등이 광주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일부 집회는 폭력 시위로까지 번져 광주의 5월은 마치 집회와 시위장을 방불케 했다.

### 5월 광주, 집회·시위장 방불

반독재 민주화운동,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동체운동이라는 5월 광주정신이 개별 직능집단이나 정치적 결사체들의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끌어다 붙인 논리로 변질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평가받는 시점에 이들이 벌인 광주에서의 시위는 대부분 광주 5·18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2003년 5월에는 국립 5·18 묘지가 학생·노동자 시위대와 경찰들의 무력 충돌 장소로 바뀌기도 했다. 2005년 5월에는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가 미 패트리어트 부대 광주배치를 반대하며 군부대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파업노동자나 환경단체의 시위등 광주 5월정신을 갖다 붙이기엔 너무 어색한 시위들도 줄을 이었다. 5월 광주에서 시위를 벌일 경우 '면죄부'라도 받는양 경쟁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광주는 항상 '과격 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없었다. 이에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은 2000년 이후 또 다른 노력을 벌여왔다.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된 5·18 정신이 '폭력 시위' 등 투쟁 일변도로 변질하지 않도록 학생·농민·노동자 단체에 5월 광주에서의 집회 자제를 호소해 온 것. 반독재 민주화투쟁이자 순수 시민공동체운동이었던 5월 정신을 멋대로 갖다 붙여 이용하지 말라는 호소였다.

### 학생·농민 단체 등에 자제 호소

4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5월 정신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녹아서 살아 숨 쉬고 있다. '5월 항쟁'이 '평화·통일''문화' '상생' '인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5월 정신은 광주시민들의 땀과 정신이 깃들여있다. 이런 각고의 노력이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따라서 5월 정신이 다른 정치·사회 문제로 인해 훼손되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2003년 5·18 민주화운동 제23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5·18 국립묘지 정문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대통령 참석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